수도권·충청권·영남권 편중 여전…국가 철도불균형 심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호남 또 소외

기존 15개·신규 28개 사업 포함
광주·전남 건의 4개 사업 중
광주~나주 철도망 1개만 반영
지방 126km·수도권 420km 격차

앞으로 10년간 정부의 철도 투자를 결정하게 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이 마련돼 22일 온라인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광주·전남이 요청한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여기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유사하게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철도의 편중 설치에 따른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대구, 광주~화순, 광주역~송정역 등 3개 제외=국토교통부는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효용 분석(BC)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존 사업 15개와 신규 28개 등 모두 43개 사업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2021~2030) 초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수와 익산을 잇는 전라선 고속전철사업이 포함돼 2030년이면 여수에서 익산까지 1시간,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2시간10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건의한 4개 사업 가운데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포함됐으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광주~화순, 광주역~송정역 등 3개는 초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낮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 경제 규모 등에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뒤지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비중을 높이거나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우려다.

호남에서는 고작 광주~나주 광역철도만이 반영된데 비해 충청권 및 영남권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등이 각각 선정됐다. 노선 연장과 투입 예산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초안에서 제외된 24개의 검토사업에서도 광주~화순, 광주역~송정역은 없었으며, 호남 관련 사업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군산~목포(복선전철) 등 단 2개에 불과해 미래에도 철도 측면에서 호남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철도 예산 투입 편중, 국토 불균형으로 이어져=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초안)은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등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공항철도 급행화, 문경~김천선, 점촌~영주 등 6개 사업,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을 위해서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전라선, 평택~부발선, 가수원~논산, 강릉~삼척, 원주 연결선 등 6개 사업이 해당된다. 이에 반해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별내선 연장(별내역~별가람역) 등 무려 14개 사업이 포함됐다. 기존 10개 사업과 더하면 24개 사업이 진행되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예산 90조원의 상당 규모에 여기에 투입될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지방광역권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강조하면서도 지역 내 균형발전 거점을 확보하는 것보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에만 충실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청회 발표 자료에서 국토부는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노선의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노선의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이 모두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연대·협력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광역철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광주·전남은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간신히 들어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간 불균형 역시 심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끝나는 오는 2030년에는 철도 영업거리가 기존 4274.2km에서 5137.2km로, 1.23배,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3979.2km로, 1.28배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한 지역개발 전문가는 "철도는 가장 중요한 교통물류망으로 이에 따라 지역 미래 발전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가 철도망 계획이 꾸준히 시행되면서 호남지역 철도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역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직자 190만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국회 정무위 통과

미공개정보 이용 사익 징역 7년
국회의원 충동 방지법도 처리
법사위 거쳐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190만명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그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가 사전에 직무 관련 이해관계를 신고·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경력을 제출해야 하며,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속·산하기관 등과의 채용 및 수의계약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이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패키지 법안'이다.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경우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경력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상임위 선임이 제한된다. 이는 내년 5월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내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심사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수위 조절 등 '셀프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거듭 제기돼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수준을 더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화상 기후정상회의 참석 바이든·시진핑과 화상 동시대면

2050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
탈석탄 노력 적극 동참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중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화상으로나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동시에 대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고,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시 주석 역시 전날 중국 외교부가 참석을 공식화하면서 문 대통령과의 화상 대면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외에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 27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첫 정상 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을 밝힌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소개하고, 세계적 탈석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한편 화상회의장은 한옥인 청와대 상춘재에 마련했으며, 현장에 최첨단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T-OLED)를 배치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연출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현장에 LG와 SK의 파우치형 전기 배터리, 삼성의 차량용 배터리 모형을 배치해 참가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중소기업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단으로 제작한 친환경 넥타이와 해양쓰레기 폐유리로 만든 라펠 핀을 착용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